부산남구 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실태연구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남구의회 |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제 출 문

부산남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남구 기업ESG 경영지원을 위한 실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연구책임

안영철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장)

연구원

송지현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용구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체 연구진의 의견이며,
부산 남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ESG 도입의 의의와 정책동향
1. 경제적·정책적 관점에서의 ESG 도입 근거
2.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정책 동향
3. 기초지자체 정책동향
4. 해외 정책 동향

Ⅲ. 부산 남구 ESG 정책환경 및 조사·분석
1. 남구 주요기업 현황
2. 부산 남구 기업 ESG 경영 인식조사 및 FGI

Ⅳ.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을 위한 방안
1. ESG 경영지원 및 청년정책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2. ESG 경영지원 및 청년정책을 위한 입법전략

Ⅴ. 결론 및 제언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2. 남구 ESG 경영의 기업 및 청년지원을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노력
3. 남구 ESG 경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노력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ESG 경영 필요성)** 지난 세대에 걸친 불평등 심화와 생태 환경 파괴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높여 UN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기후환경정책 대응을 유발

○ 파리협정과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특별보고서 채택에 따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제출 의무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ESG의무공시를 요구,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은 친환경, 사회적 활동을 명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 2025년 의사결정 체계 또는 방식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무공개 요구

○ EU공급망 관리 의무화에 따라 EU 역내 대기업 및 상장사, 고위험 중소·중견기업, 금융기업 대상 ESG관리 원칙 협의와 원칙에 대한 협력사 이행 여부의 장기검증 요구되어 국내 및 해외 ESG 이슈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자사 제품 생산에 대해 사회·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공급망 전반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전사적 관리 시작. ESG리스크 관리는 노동관리, 생산공정 내 유해물질 배출, 제품가치사슬 내 존재 가능한 규제위반 가능성 최소화 요구

○ 부산 남구 내 기업 또한 국내외 ESG 정책변화와 고객사 ESG 요구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ESG로 인해 부산 남구 기업의 발생 가능한 기

회 요인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책적 사전 대응이 필요

○ **(지자체의 지원정책 변화)** 대다수 광역·기초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조기 제정하거나 의회 내 연구회를 통해 검토하여 대내외 ESG경영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관내 기업을 위한 ESG 정책을 지자체가 도입·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산 남구의 경우 지자체 내 기업의 ESG현황 및 관련 정책, 지원 내용이 부재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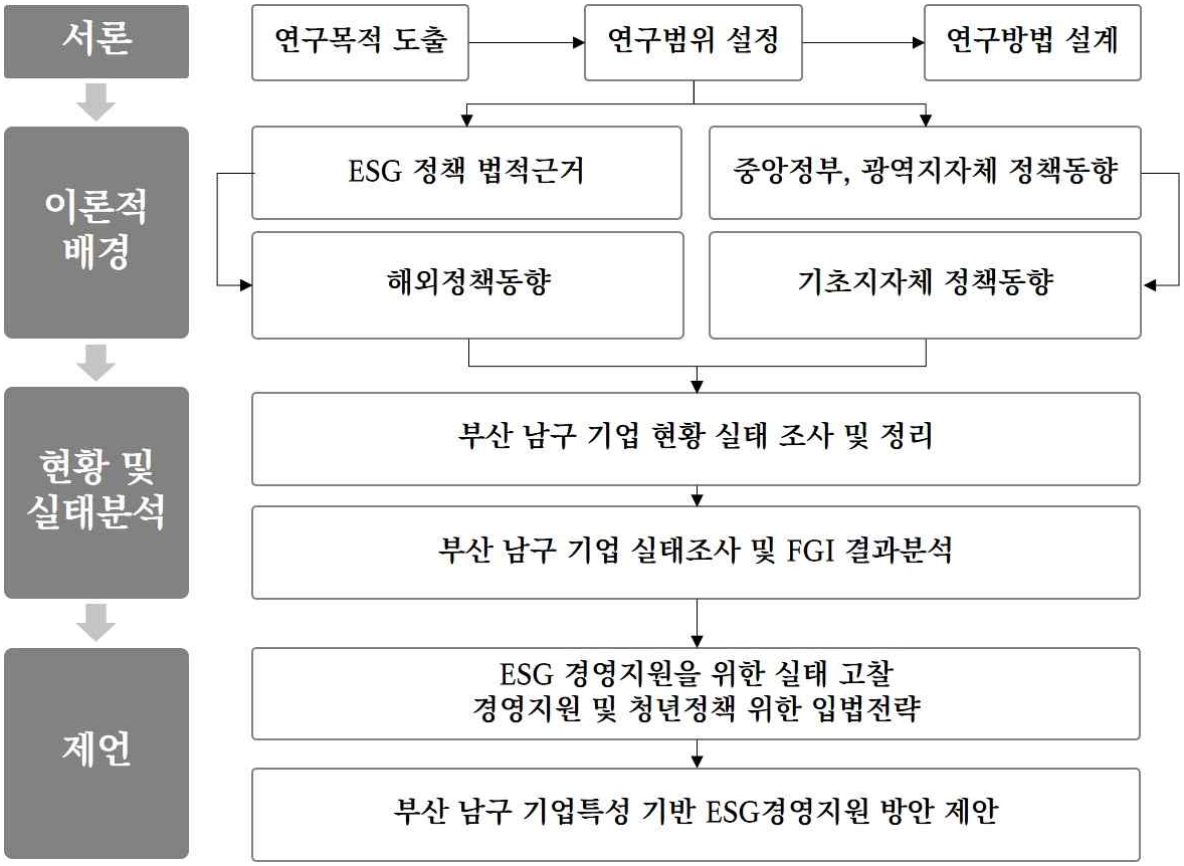
○ **(활성화 방안 모색)** 따라서, 부산 남구 기업의 ESG경영 실태 및 관련 청년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외 ESG경영 활성화 지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산 남구 소재 기업에 맞는 ESG경영 활성화 방안과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제2장, 제3장을 통해 글로벌 기후환경 및 기업경영 방식의 기초가 되는 ESG 경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사례, 국내외 현황분석과 남구 기업에 대한 ESG 현황 분석을 통해 부산 남구 기업의 ESG 경영 지원방안 및 청년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부산 남구의 기업 환경적 요인 및 부산 남구의 ESG 경영지원 관련 정책,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 및 관련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현황을 정리하고 부산 남구 소재 기업가 **초접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부산 남구 ESG 경영 및 관련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연구진이 제안하는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 관련 정책과 법제화 방안, 제언을 도출함

○ 본 연구는 <그림1-1>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그림1-1> 연구흐름도

|| ESG 도입의 의의와 정책동향

1. 경제적·정책적 관점에서의 ESG 도입 근거

가. ESG에 의한 기업규제 환경[1)]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비롯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됨으로써 국내에도 각종 환경안전사고 대응책으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하는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이 발표·시행되고 있음

- 대표적인 법·제도로는 화학물질규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전국단위 대기총량제도 등이 있으며 강화된 규제는 기업의 재무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전면 도입 시 강화된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부담 가중 예상, 해당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 환경 또는 사회적 책임이 주로 정부의 대 기업규제 문제, 즉 기업의 규제대응 및 소송의 주요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로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부각 및 ESG 요소는 글로벌 투자자의 전 세계 기업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함
- ESG에 의한 기업규제 환경변화에 있어 정부의 공적 규제강화와 함께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사 등)가 주도하는 사적·자율규제 강화, 기업이 기존 적용받던 전통적 준법 리스크와 함께 국제규범 및 외국법령, 연성규범 리스크가 존재하는 ESG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2)]

---

1) 한국산업지능화협회, 2023,『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와 도전』

2) 윤진수·한상훈·안성조, 2022,「법의 미래」, 법문사

나. ESG 개념과 발전과정

○ 전통적인 기업 성과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경제적 가치로 평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인권침해도 GDP 기여도가 높을 경우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음(이은선·최유경, 2021)

- 1984년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 누출, 1990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의 기름 유출, 1996년 나이키의 파키스탄 아동노동 착취 등의 사건들은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
- 이에 비정부기구는 기업경영이 환경,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정보공개 요구 및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불매운동 등에 따라 이후 소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보고서에 최초의 정의가 수록. 인류의 빈곤, 인구증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천명

-"ESG"라는 용어는 2004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ESG 이슈를 자산관리, 유가증권거래에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과 권고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 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 최초 사용
- 2005년에는 UNEP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협력하여 ESG와 투자의 기준관계에 관한 법적 해석 보고서(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r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를 발간, 해당 보고서는 투자전략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어떻게 내재화 할 것인가에 대해 투자 기준 분석에 ESG 요소 포함 및 투자사의 수탁의무 규범을 정립, 기관 투자자의 ESG 중점 투자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됨

○ 2006년 **UN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6개의 금융 투자원칙을 발표하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을 비롯 글로벌 주요 투자사 1,750개가 해당 원칙을 지키기로 서명함으로써 현재 **기업경영의 ESG 프레임워크 기반을 제시**함[3)]

- 원칙 1 :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함
- 원칙 2 : 소유 정책과 관행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됨
- 원칙 3 :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게 ESG 이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함
- 원칙 4 : 투자업계의 책임있는 PRI의 수용과 이행을 촉구함
- 원칙 5 : PRI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함
- 원칙 6 : PRI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상황을 보고함

○ 전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ESG관련 법안 마련 및 기업 정보공개 의무화 등 ESG 제도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민간 측면의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ESG 관점 투자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ESG 적극적 대응및 ESG 리스크 완화, 성과창출 목적의 민간 이니셔티브가 결성됨

○ 최근 ESG는 전 세계적 트랜드화로 인해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사회구성원의 관심에 따라 기업생존 및 핵심적 관리요소로 부각, ESG는 기업 목적달성을 위한 필수요소로 기업의 장기발전가치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Russell Investments(2020), 『Summary of the 2020 PRI Assessment』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고려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핵심가치 및 기업 자본조달 측면의 필수 관리요소가 됨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정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통적 재무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함

-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4)]

다. ESG에 의한 기업경영 환경 변화

○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따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주주), 고객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는 해당 기업에 대해 ESG에 관련된 새로운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적 규제(법령에 따른 공적규제와 구별됨)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자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위치한 원료 및 부품 공급사들에 대해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구하거나 최소한의 경우 공급사들의 ESG 리스크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성 실사 법제를 비롯하여 ESG관련 법령·제도가 이미 발효 또는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공적규제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사적규제 및 집행에 대한 ESG경영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큰 변화 요인임

라. ESG관련 국내외 법규와 기업경영 영향

4) 한국거래소(2021),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 유럽연합 택소노미(EU Taxonomy)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강화된 ESG공시 규제로 EU 택소노미에 따른 주요 핵심성과지표(KPIs, 매출액, 자본적 지출, 운영경비 중 EU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비율)를 해당 기업들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주요 개정에 따라 탄소세 부과시점 단축(2025년), 적용 품목 및 내재배출량 범위 확대, 무상할당 폐지시점 단축(2029년)예정. 국내 EU 수출액 중 CBAM 개정안 우선적용대상 범위에 속한 6가지 품목(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비중은 전체 수출품목의 15% 내외로 관련 기업 탄소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 및 전환기(2024년)까지의 탄소배출관리·측정·배부 프로세스 재정비, 탄소배출 감축시설 투자확대 등의 대응 시급[5)]

○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법은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실사를 의무화 한 것으로 실사시행 모니터링 정보공시 및 탄소중립 전략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임. 대상은 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그룹에 한정되었으나 EU기업과 거래하는 역외기업에 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관련 법안(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은 가장 체계적인 기후위험 공시 관련 법안으로 자본시장 중심의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각국 감독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Teskforce on Climated-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온실가스 프로토콜 통합, 재무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5) 안영철, 2023,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국제통상질서”(2023 한국무역통상학회 하계학술대회 메인세션 발제문)

량의 계량화된 공시 및 인증범위 구체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후위험과 사업모델 간 영향,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절차, 재무제표 계량분석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재무영향 분석 및 발생된 자본적 지출 및 비용의 재무제표 내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직접배출), Scope2(에너지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에 대한 외부검증 및 Scope3(가치사슬 전반에 의한 배출)공시와 측정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포함

○ 국내의 경우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ESG기본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내용은 ESG 공시의무, 녹색산업 분류체계, ESG 채권표준 개발, 녹색자금 조달 및 그린워싱 방지책, ESG 평가기관 감독체계 마련 및 평가, 금융기관 ESG 상품공시,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 등 ESG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지원 방안을 단일화하고 정부가 ESG 이행계획을 수립한 기업과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금융 및 세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음[6)]

2. 중앙정부, 공기업 및 광역지자체 정책 동향

가. 중앙정부 및 공기업 ESG 정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 마련, 제도정비 추진. 산자부는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에 대비 산업생태계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목표로 2020년 12월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발표[7)]

– 첫째, 「산업발전법」 근거, 시장혼란 최소화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표로써 K-ESG를 마련,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K-ESG인증 발급. 법 제

6) "'ESG기본법'초안 최초공개!", 이원욱 국회의원 보도자료(2023.07.19.)
7) 산업통상자원부(2020),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

18조 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지표”설정

- 둘째,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교육, 평가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친환경·안전투자를 지원
- 셋째, 정부포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ESG우수기업에 대해 R&D·금융·마케팅 등 정부지원을 우대하여 지속가능경영 유인을 강화
- 넷째, 기업 간 연대·협력을 강화, 생태계 및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 해외협력 네트워크 활용하여 국제규범 제정에 능동적 참여

○ 관계부처는 ESG글로벌 논의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ESG 인프라 확충방안’발표

- 중앙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방안’은 7개 핵심 주제로 구성
  1) ESG 경영공시 활성화
  2)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강화
  3) 공공기관 ESG 경영
  4) ESG 채권·펀드 활성화
  5) 시장자율규율체제
  6) 공공부문 ESG 투자
  7) ESG 정보플랫폼 구축
- 또한, 상장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의무적‘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추진, 현재 80여개 기업이 매년 공시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사 외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 공시의무 확대 등 ESG 리스크 관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망 협력이 ESG 리스크

관리 전략임을 밝힘. 국내 ESG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2월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8)]

- 매월 포럼 개최, 산업 공통 적용 ESG 공시, 금융 등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신속 공유
- 전자, 정유, 자동차, 바이오, 식품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실사 및 관련 평가항목의 트랜드를 분석·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
- K-ESG 가이드 라인 및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적용방안을 구체적 제시, 중소·중견기업의 기본적 ESG역량 확충 목표

○ 환경부는 2020년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특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 마련, 기업의 환경적 성과평가 위한 표준체계 구축[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추진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 표준 평가체계 활용한 환경성 평가,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관리업무 담당
-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대상에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단체에서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확대

○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으로 기업 공시부담및 공시 사각지대 감소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

8)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02.10.)
9)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 대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구체화

선 방안”수립[10]

-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 체계를 개편, 일반투자자 위한 안내서 제공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체계 개선
- 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목적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제공,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ESG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정보공개 확대 추진
-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 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 피해초래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 공시 사각지대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2021년 8월 민간주도의 ESG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환경부, 산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ESG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록,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1년 11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수립 발표

- 중소기업 대다수는 ESG 개념이해 부족, 선진국 및 국내 대·중견기업에 비해 ESG 대응역량 부족 및 ESG 관련 평가지표도 업체별로 상이하고 일원화된 정보제공 채널의 부재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 따라서, 대기업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및 중소기업의 ESG 도입 지원을 위해 각각 ‘수출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발족

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2021).『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산자부는 글로벌 대기업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강화와 국가별 공급망 실사제도 확산에 대응 위해 2021년 12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지원 협의회'발족을 통해 ESG 대응 시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 기획재정부는 2021년 3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항목을 확대,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공개대상 항목에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의 10개 공시항목 추가하여 공공기관 ESG 경영 본격화[11)]

- (환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라 환경부'환경정보공개시스템'이나 환경부에서 이미 공개 중인 정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항목 대폭 확대
-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따라 이미 관리 중인 정보
- (지배구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미 관리 중인 정보

○ 'ESG 인프라 확충방안'의 구체화를 위해'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2022년 12월 발표[12)]

- ISSB 국제표준 및 국내산업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ESG 공시제도와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제도 간 유사·중복항목의 명칭일원화 및 의무이행 간주 등의 연계강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 EU 공급망 실사 확산의 적기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력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대응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반영, 사회적채권 가이

11)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2.07.)
1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드라인 마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지수(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 추진 및 ESG 평가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추진

-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분 ESG 경영 투자선도를 위해 해당 기관에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은행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탄소 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 방침
-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 위한 민관합동컨트롤 타워로서 「ESG 협의회」 설치를 통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 폭넓은 의견수렴의 소통창구 역할과 ESG 고도화 방안 추진실적 점검을 총괄한 계획 추진 밝힘

○ 2023년 5월 금융위원회의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및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개발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발표, 2023년 9월부터 시행. 총 6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는 준법 감시체제 등의 내부통제체제 마련,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기준, ESG 평가방법, 기업별 ESG 평가등급 및 결과 공개방식, 기관 및 기업 내 이해상충 관리의무 부여, 평가사와 평가대상기업 관계 규율 등을 규정 적용

○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 이후, 최근 지속가능성 및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원칙 개정(2019년 11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본격적으로 ESG 평가체계 구축

<표2-1>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중 ESG 항목

구분	ESG 항목
E 환경 (5)	• 에너지사용량 :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공시(4월) • 폐기물발생량 : 공공기관의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공시(4월) • 용수사용량 : 공공기관의 연간 용수(물) 사용량 공시(4월) • 환경법규 위반 현황 :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 공시(수시) • 저공해 자동차 현황 : 저공해 자동차 보유 구매현황 고시(7월)
S 사회 (3)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시(7월) • 인권경영 :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공시(7월) • 동반성장 평가결과 :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공시(7월)
G 지배구조 (2)	• 자체 감사부서 현황 :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공시(4월) • 청렴도 평가결과 :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7월)

자료 :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2.07.)

○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공공기관도 ESG 경영 강화[13)]

– 한국남동발전은 선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개발, 발전폐기물 100% 재활용 추진, 인권경영을 협력업체와 자회사 등으로 확대,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 ESG 경영 전사적으로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친환경 농산물 확산, 유통단계 감소, 탄소배출저감, 먹거리 활용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및 로컬푸드 발굴 등으로 ESG 가치 확산

– LH는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을 ESG 경영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방향 수립, 환경(E) 분야에서 제로에너지 주택 표준모델, 기술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3만톤 감축,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022년 8,000억원 이상 투자

○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최종안

13) 한동숙, 2021,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발표 지연'에 따른 국내 기준 수립 기간 부족을 이유로 **ESG 공시의무를 2025년에서 1년 유예 방안 검토**, 재계는 최대 4년 유예 요청 중인 상태

나. 광역지자체 ESG 정책 동향

○ 2023년 10월 기준 전국 17개 특·광역지자체 중 14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였으며, 광역지자체 중 경북의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조례', 충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지원대상 주체 범위를 구분하여 ESG 관련 세밀한 정책추진을 목적함으로써 지방정부 ESG 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또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정부, 기초지자체,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및 일부 조례의 경우 기업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 적시

○ 광주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ESG 경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간기업외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조례 상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민관위원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을 다루도록 함
- 또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광공사 등은 "ESG 경영 선언"을 채택, 각 기관의 환경, 에너지 부분의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등 광역단위 지자체 중 선도적 ESG 경영을 진행

중

○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를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민관위원회와 별개로 자문단 구성 규정을 두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최초 ESG분야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14)]

- 부산시는 기술보증기금과 지역 내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 공동발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시와 기술보증기금이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
- 기술보증기금 추천 우수기업은 부산시 자체평가를 거쳐 부산시 ESG 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증
- 이후 인증기업이 지역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유치를 받도록 지원, 대기업 및 지역이전 공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사업을 연계, 공동사업 프로그램 제공

○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인식,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유럽, 미주 등 해외수출 중심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진행[15)]

14) "부산시, 지자체 최초 ESG 우수 중소.벤처기업 인증… 혁신성장 발판 마련",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2.03.25.)
15)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기업 금융지원 확대", 경상남도 보도자료(2022.03.31.)

- 전국 최초 제조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델을 개발, 도내 42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평가진단 실시
- 2022년 한국생산성본부, (주)나이스디앤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8개 기관과 '2022년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ESG 지원사업'업무체결,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컨설팅 및 환경시설 개선, 작업장 안전강화 위한 정책·금융자금 지원

○ 울산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ESG평가지원 협약 체결[16)]
-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은 울산시 기업 적합 수준의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제공,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사를 통해 ESG 대응 수준 진단 및 향후 ESG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대구광역시는 수출 중심 제조업 및 다수의 대기업 협력업체가 소재한 지역적 특성으로 주요 수출국 ESG 규제 강화 시 외부 투자감소, 지역의 수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 예상. 따라서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본격 추진[17)]
- (ESG 컨설팅) 지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선정, ESG 경영 필요성 인식 강화 교육, ESG 경영환경 분석 및 항목별 ESG진단·평가, 핵심 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계획 수립, ESG 보고서 작성·검증 지원
- (ESG 진단평가) 지역 중소기업 30개사 선정, 항목별 ESG 진단 및 평가, ESG 진단평가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서울시의회는 2023년 4월부터 지속가능경영학회와 공동주최로 「2023 ESG 서울포럼」을 격월 개최. ESG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가능한 선도도시 개발, 전략수립, 구현을 위해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의원, 산하

16) "'이에스지(ESG)평가지원 업무 협약 체결'", 울산광역시 보도자료(2021.08.17.)
17) "대구시-대구상공회의소, 지역기업 ESG 경영 밀착 지원", 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22.04.04.)

기관장, ESG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참여 정기적 회의 운영

○ 서울연구원(황인창 외, 2022)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연구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로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걷어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하며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기업과 기관의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가치 창출의 지속성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 단, 해당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ESG 인식수준은 높으나 재정적 문제로 도입과 실천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해 적절 수준의 재정지원과 인력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개진함. 공공부문,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식의 부족과 정부 지원사업 인지율 낮음이 드러나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행정부의 해당 대상에 대한 실질적 재정·기술적 지원 방안 필요를 강조, 이에 따른 ESG 경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도쿄·토론토와 같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관내 기업에 대한 ESG 도입 및 실천사업 지원재원 마련, 금융기관이 집중된 여의도를 ‘녹색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금융업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연계 등을 제안

3. 기초지자체 정책동향

○ 2023년 10월 기준 국내 226개 기초지자체 중 35개(서울 강북, 서울 성동,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 서울 영등포, 서울 강남, 서울 관악, 서울 금천, 서울 구로, 서울 동작, 인천 서구, 인천 남동, 대구 달서, 대구 북구, 울산 동구, 대전 유성, 광주 남구, 부천, 화성, 수원, 성남, 충주, 아산, 구미, 김천, 경주, 진주, 창원, 양산, 완도, 순천, 나주, 고창, 진천, 여수)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 대부분 기초지자체는 상위법령, 광역지자체 조례를 준용하여 기초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ESG의 경우 상위법인 'ESG 기본법'은 현재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지속가능발전(SDGs)기본법'기반 조례를 변용, 수정 적용하거나 ESG 선도 광역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고 있음

○ 서울 관악구는 2023년 3월 행정에 ESG를 도입하는 '더(The) ESG 관악'비전 선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관악형 ESG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주민친수공간 조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공직자 청렴도 향상 등 분야별 46개 중점사업을 지정하였으며, 2023년 7월 관악구의회는 ESG 조례를 제정

○ 부산의 경우 수영구가 2023년 4월 부산시 최초로 '수영구형 ESG 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착수, 수영구 관내 전체 사업 및 정책을 ESG 행정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 할 예정

○ 이 외에도 'ESG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화성, 수원, 전북 완주 등의 기초 지자체에서 ESG 가치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수원시는 환경 관련 예산 중 환경보호 예산 비중을 88.8%로 증액, 2030년까지 환경관련 분야 9조원 투자, 기초자치단체 중 탄소중립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ESG 행정 추진,'탄소중립 기본전략'수립 및 정책 시행, 2023년 9월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북 완주군은 관내 농협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유통 협약 등을 통해 탄소 저감운동 및 ESG 가치확산을 위한 지역상생 방안 로드맵 구축

4. 해외 정책 동향

가. 글로벌 ESG 정책 동향 및 자금흐름

○ 2022년 전 세계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 강화 및 법제화 추진 등 제도적 장치 강화, 경제, 통상정책 입안 시 ESG 요소 강화[18)]

- ESG 금융자산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수익률 악화와 실효성 논란에 따라 위축, 그러나 유럽 중심의 non-ESG 자산 대비 양호, 중국 중심 친환경 설비투자로 인해 에너지 전환 투자 금액은 화석 연료와 동일한 수준 달성
- ESG 섹터는 정책 모멘텀 확보, 금융여건 개선 등 자금 유입 증가 및 자산가격 반등에 따른 지속가능금융 확대, 각국 경쟁적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기업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관련 자산 비중 확대
- 탄소배출 허용총량 감소 대비 기업의 배출권 수요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 참여, 투자자금 유입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 탈탄소화 정책 주목한 핵심 광물 확보, 역외기업 차별 우회 및 탈탄소화 산업 선점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가 전망
- 공급망 ESG 요건 강화, 자원 무기화, 보조금 지급 경쟁 등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국제무역마찰 격화
- 글로벌 ESG 흐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 자금 운용 방식의 ESG 기반 접근 확대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등에 의해 글로벌 ESG 및 탈탄소화 추진 가속

- '환경'중심적 주요국 ESG 정책에서 인플레이션, 팬데믹 이후 노동

18) 강영숙.신술위. 2023, "글로벌 ESG 정책동향과 자금흐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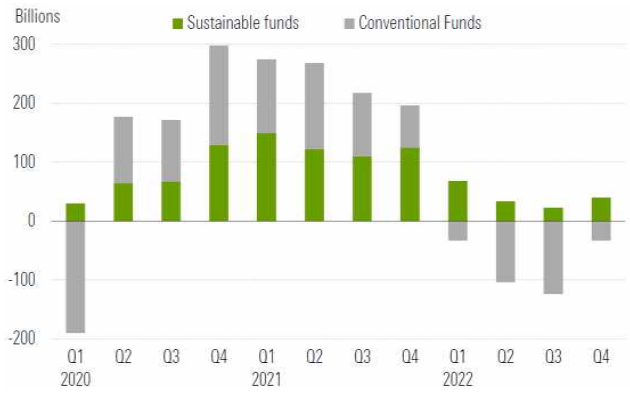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라 '사회', '거버넌스'로 변화

- EU 택소노미 및 공급망 실사지침,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등으로 환경 외 '사회'쟁점화, '거버넌스'의 경우 상대적 중요도가 낮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 주요국의 ESG 공시의무 강화 및 법제화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발표, 은행들의 기후위기 전략 미이행 또는 그린워싱 시 법적제재 가능, 에너지 전환 및 공급망 확보 문제로 경제 및 통상 정책 ESG 정책과 동조화(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핵심원자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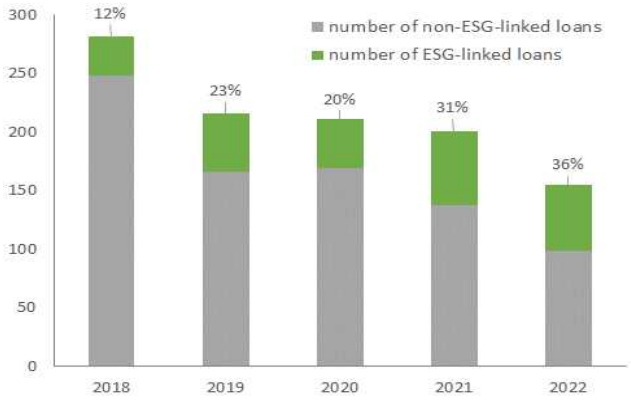
○ 유럽의 선도적 ESG 정책 강화에도 불구, 펀드 등급 강등 등의 불안요소에도 순투자 기조 지속(미국의 투자 위축 상황과 차별)

<그림2-1> 지속가능펀드 vs 일반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Morningstar

<그림2-2> EMEA 기업 대출 유형별 비중



자료: Bloomberg (2022년 11월 투자적격등급 대출기준)
출처: 강영숙, 신술위(202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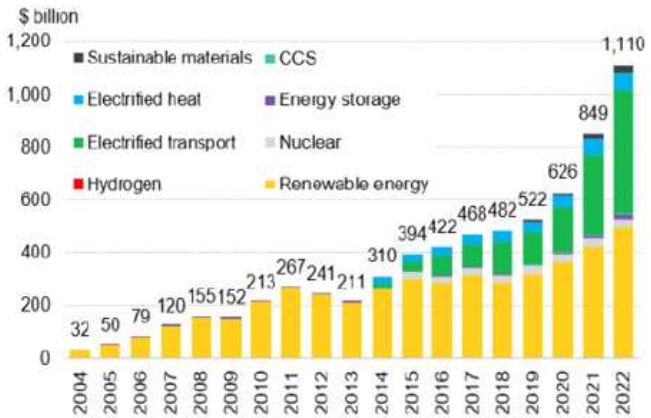
○ 대부분 기업 및 섹터는 탈탄소화 추진 초기 단계로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요구, 2021~2024년 설비투자, R&D 증가율은 5.3%(CAGR)로 높아질 가능성(Goldman Sachs)

- 2022년 저탄소 에너지 전환 투자금액은 USD 1.1조(+31%, yoy)로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 섹터 사상 최고치 기록, 재생에너지(USD 4,950억,

+17% yoy),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USD 4,660억, +54% yoy) 투자확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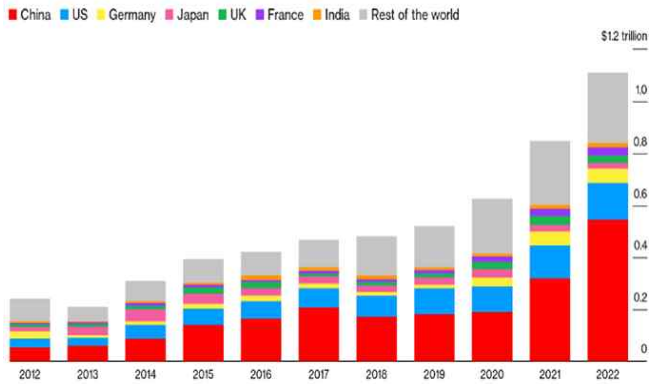
- 중국(USD 5,460억), EU(USD 1,800억), 미국(USD 1,410억) 순으로 중국의 정책적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부양, 중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건설 등 2020년부터 2년간 연 50%의 높은 재생에너지 투자 진행

<그림2-3> 에너지 전환 섹터별 투자동향



자료: BloombergNEF

<그림2-4> 에너지 전환 국가별 투자 동향



자료: BloombergNEF

출처: 강영숙, 신술위(2023) 재인용

○ 글로벌 ESG 규제강화로 인한 탈탄소화 관련 투자상품 수혜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기여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추가 지침 발표
- 2023년 1월 지속가능채권 발행 1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ESG 펀드 자금유입의 지속적 증가
- 유럽중앙은행(ECB) 2023년 ESG 관련 적극적 비중 조정,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그린본드, 친환경 회사채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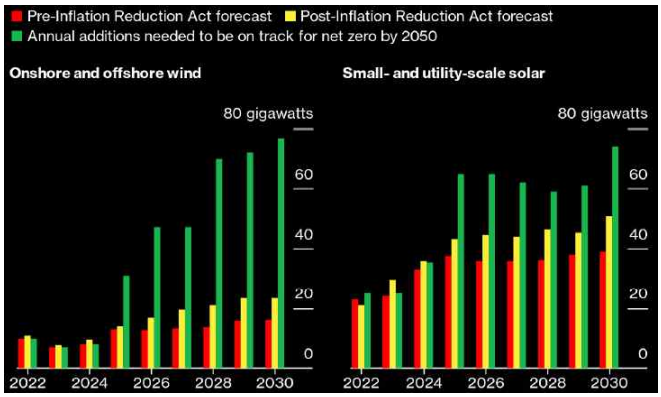
○ 각국의 경쟁적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업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관련 자산의 비중확대에 따른 탈탄소화 산업 성장기반 강화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금액 증가 필요, 미국의 역대 최대규모 지원책 발표에 따른 탈탄소화 산업확대 전망(재생에너지 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표에 따른 배터리 중심의 리쇼어링, FDI 중심의 산업 재편)

-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ESG 공시 의무화, non-ESG 좌초자산 증가 위험 대비 탄소저감 기술 투자 확대

<그림2-5> 미 풍력/태양광 발전 규모 전망



자료: BloombergNEF

<그림2-6> EU 탄소배출권 가격 및 ETF 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출처: 강영숙, 신술위(2023) 재인용

○ 탄소국경세 부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탈탄소화 추진 과정의 광물 채굴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상쇄 크레딧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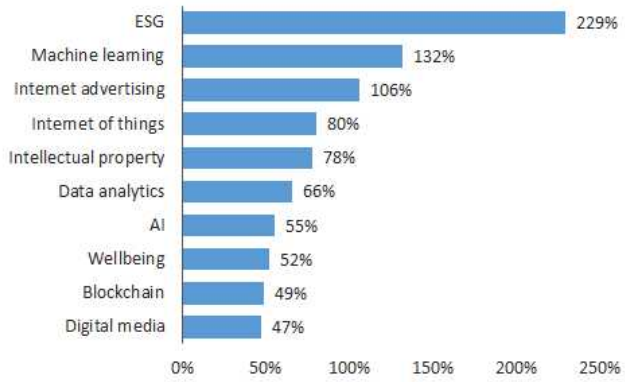
-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년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구입마감(4월) 전 상승 2023년 2월 21일 중 €100 돌파, 관련 펀드 자금의 유입 재개(그림 7)
- 탄소 배출 할당 총량 감소에 따라 민간 부분 탄소 저감 투자 증가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19] 확대 환경 조성
- 런던증권거래소는 탄소 저감 펀드 상장 규정 제정, 글로벌 은행은 컨소시엄 형태로 탄소 크레딧 거래 플랫폼(Carbonplace) 투자
- 각국의 정책강화에 따른 탄소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높은 가격 변동성, 그린워싱, 국가간 입장차이 문제

19)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저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신력을 가진 제3 기관의 검증을 받아 상쇄 크래딧을 획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심수연, 2023)

○ ESG 요건 강화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고 규제 대상 품목(알루미늄, 철강, 팜유, 목재 등)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에 타격, 선진국과 신흥국 간 GDP 격차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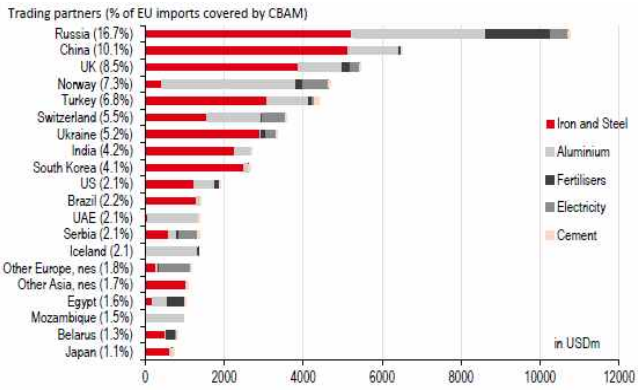
- EU 탄소국경조정제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는 EU 수출 비중이 큰 일부 국가에 집중 예상(그림 9), 규제회피를 위한 제조업체들의 신흥국 이탈 및 리쇼어링 촉발 가능성 증가
- EU는 삼림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수출입 규제 방침 합의, 동남아 열대우림, 남미(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상 규제
-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신장 제조 면화 수입금지 및 중국, 동남아 일부 국가를 대상 탄소배출 기준 미충족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에 탄소 관련 관세 부과 등의 글로벌 친환경 철강 클럽 제안

<그림2-7> 2022년 그린필드 FDI 인용 테마별 증가율



자료: Investment Monitor

<그림2-8> EU 국가별 CBAM 규제품목 수입 비중



자료: HSBC (2015~2019 평균 기준)

출처: 강영숙, 신술위(2023) 재인용

나. 국가별 ESG 정책 동향

1) EU[20)]

○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지속가능한경제 위한 자본흐름 유도, 리스크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한상범.권세훈.임상균, 2021,「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관리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반영 및 금융의 투명성 제고 목적의 10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발표

○ 녹색활동에 대한 투자촉진 및 그린워싱 방지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EU 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제정(2019년 12월), 2020년 6월 공포를 거쳐 7월에 발효

- EU 분류체계는 6개 환경목표 및 4개 판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

○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1년 3월부터 시행

- EU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에게 기업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상품 수준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시 의무화

<표2-2> EU 분류체계 규정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판단조건
• 기후변화 완화 • 기후변화 적응 •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와 복원	•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 주지 않을 것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 기술선별 기준 부합

자료 : 임수빈, 2020,「EU 분류체계(Taxonomy)현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고재경·강철구·예민지 외 1명, 2021,「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2017년부터 역내 기업 중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그룹에 대해 사회 및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ctive, CSRD)제안(2021년 4월)

-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높이기 위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 적용 범위 확장, 정보보고 감사의무 도입 및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마련 등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규정

○ 회원국이 도입한 ESG 법안은 각국의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ESG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 필요에 따라 ESG 관련 기업활동을 확인·대응·시정을 의무화 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Directive)'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한 12개 실행 법안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대책을 망라한 패키지 입법안 'Fit for 55'발표

2) 독일[21)]

○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독일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40% 감축)를 초과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을 발표, 기후보호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역할 강조,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은 2019년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

- 기업구조, 위기관리, 시나리오 경영, 아웃소싱 등 기업의 전략적인 ESG 평가방식 제시

21) "독일의 ESG 최신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 뉴스(2021.05.02.)

<표2-3> ESG 관련 리스크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

분류	주요내용
기업전략 및 거버넌스 (Business Strategy and Governance)	• ESG에 반하는 정책 검토, 새로운 정책 수립 또는 ESG 요소 고려 정책수정
조직 및 과정 (Organization and Processes)	•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관련 요소 명시 및 해당 요소들이 잠재적 미칠 영향 고려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 ESG 관련 위기전략 및 프레임워크 구상, 정책수립 및 보고 등에 포함
시나리오 경영 (Stress Tests)	• ESG 관련 위험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구성, 기관의 대처능력 평가, 개선
아웃소싱 (Outsourcing)	•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협약, 관리 등 과정 전방에 ESG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 지 검토
등급평가 (Ratings)	• ESG 관련 요소가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포함
공시 (Disclosure)	• TCFD 권고안 기반

자료 : “독일의 ESG 최신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02)

3) 프랑스[22]

○ 프랑스는 2010년 그르넬 법(Loi Grenelle)제정을 통해 투자회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을 투자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연간보고서에 의무적 명시 규정,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TECV) 공표 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투자기관의 기업투자 기준 강화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TECV)은 투자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투자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에 관한 기준 포함, 에너지 및 생태전환 기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여 연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의무적 공시토록 함

– 또한 기업활동 관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치,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여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생태전환 관

22) “프랑스 ESG 정책동향 및 기업 대응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8.31.)

련 정보 구체적 정의토록 함

4) 미국[23)]

○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ESG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자발적 시장 주도형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ESG 관련 규제 변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및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3월부터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공시 의무화 규정 도입을 준비 중, 2023년 4분기 완료 예정
- 기업이 ESG 측정 기준을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기후 리스크, 정치적 지출, CEO 급여 및 세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2021년 6월 하원 통과

○ 미국 내 주(州)수준에서는 캘리포니아 포함 12개 주가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 위한 요건 제정 또는 제정 준비중.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오레건,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금 시스템 활용
- 캘리포니아주는 ESG 요소를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교사 퇴직 연금에 통합한 선도주자
- 일리노이 주의 지속가능투자법은 공적자금 관리 관련 모든 공공 또는 정부기관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 개발, 발표 및 구현토록 의무화
- 오래건 주 투자위원회는 ESG를 1,0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공식적 통합

○ 미국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투자 포럼(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자산이 2조 9천억 달러로 증가[24)]

23) "사례로 보는 미국의 ESG 도입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2021.05.12.)

Ⅲ 부산 남구 ESG 정책환경 및 조사·분석

1. 남구 주요기업 현황

○ 부산 남구 주요산업 및 기업현황

<그림3-1> 부산 남구 매출액 기준 주요산업 및 기업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2022)

- 남구의 매출기준 주요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부산상공회의소, 2022)
- 제조업종 및 매출액 기준으로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 산업(1조 720억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4,164 억원),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산업(3,584 억원) 순

24) Woll, 2019,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ye ESG Investing Strategies for Returns and Impact", Opinions ; Markula Center for Applied Ehtics. "https://www,scu.edu/ethics/all-about-ethics/trends-in-the-implemen-tation-of -esg-policies-in-state-and-local-governments" (Accessed Oct, 2022)

- 남구 소재 주요 제조업 공장은 동국제강 감만공장, 피피지코리아 용당공장, 옵스 감만공장, 한국쉘석유 용당공장, 한탑 대연공장, 인터오션 감만공장 등이며 해당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남구의 주요 제조기업으로 고용 및 지방세수 기여도가 높음

<표3-1> 부산 남구 매출액 기준 주요기업 및 업종

단위: 억원

순위	기업명	업종	매출액
1	(주)부산은행	은행 및 저축기관	26,570
2	엘티삼보(주)	토목 건설업	7,448
3	세방(주)	도로 화물 운송업	5,703
4	(주)한국거래소	금융지원 서비스업	4,324
5	(유)피피지코리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16
6	한국쉘석유(주)	석유 정제품 제조업	2,106
7	극동건설(주)	건물 건설업	2,069
8	은마석유(주)	연료 소매업	1,979
9	(주)BNK금융지주	기타 금융업	1,913
10	부산항터미널(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849
11	(주)삼한종합건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660
12	(주)비락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539
13	(주)대한이엔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248
14	(주)한국페트로	기타 전문 도매업	800
15	종로전기(주)	전기 및 통신 공사업	741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2022

- 부산 남구의 경우 부산 최대 창업 집적지역으로 2019년 부산 대연·용당 창업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266개 스타트업 기업 소재
- 부산 남구 스타트업 기업은 주로 관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비즈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으며 경성대 창업보육센터 및 글로벌테크 비즈센터 15개사(IT, 친환경 소재), 동명대 창업보육센터 21개사(IT, 제조, 기계자동화), 부경대학교 및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144개사(기계·제조, 정보통신, 전기·전자, 부품, 소재, 수산) 등으로 구성

- 남구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업이 주요업종으로 나타나나 향후 미래 발전산업으로써 IT, 정보통신 분야와 함께 전통적인 철강, 석유화학 제조업 또한 복합적인 산업군을 구성하고 있어 ESG 경영에서 강조되는 기후환경 투자, 저탄소 경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체계가 시급한 지역임

2. 부산 남구 기업 ESG 경영 인식조사 및 FGI

○ 부산 남구 ESG 경영 및 청년지원 정책 방안연구를 위해 현재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음

- 설문 및 FGI대상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2> 조사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기업유형	업종
참여자 A	남성	50	중소기업	금속가공
참여자 B	남성	20	기타	기타 개인서비스
참여자 C	남성	40	중소기업	전자부품
참여자 D	남성	40	중소기업	기타 제조업
참여자 E	여성	50	중소기업	전기장비
참여자 F	남성	40	중소기업	과학기술서비스
참여자 G	여성	30	중소기업	기타 개인서비스
참여자 H	여성	40	중소기업	화학제품
참여자 I	남성	60	중소기업	정보통신
참여자 J	남성	60	중소기업	정보통신

○ 부산 남구 기업인들의 ESG 기본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ESG 경영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사안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GI 조사참여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주로서 매출과 직결되는 고객 관련 ESG 요소와 지배구조적 요소 등에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대응 및 환경경영에 대한 투자 미진, 기

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기업 ESG 경영 주요사항 이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나타냄

- (정리) 남구 소재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에 대한 일반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향상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부족함.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될 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음

<표3-3> ESG 경영 기본 인식

No.	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E1	기후변화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9	1	4	**2.888**	1.054
E2	유해화학물질(대기, 토양, 수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절감에 노력한다.	9	2	5	**3.333**	0.866
E3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위해 연구, 개발, 실행에 노력한다.	9	2	4	**3.111**	0.928
E4	환경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9	2	4	**3**	0.866
E5	지속가능경영과 성장을 위해 환경경영활동에 많은 투자를 한다.	9	1	4	**2.222**	0.833
S1	지역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자선기부, 자원봉사 등)을 실천한다.	9	1	5	**2.667**	1.414
S2	협력사(원청, 하도급)을 파트너로 존중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9	3	5	**4.111**	0.782
S3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9	3	5	**4.222**	0.677
S4	직원안전 및 보건을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9	3	5	**4.222**	0.677
S5	고객만족 실천 및 소비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9	4	5	**4.222**	0.441
G1	주주(투자자)의 가치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9	2	5	**3.444**	0.882
G2	오너리스크에 대한 비리사실이 없다.	9	4	5	**4.556**	0.527
G3	경영진이 높은 도덕성 및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9	3	5	**4.222**	0.677
G4	기업경영활동(사업내용, 재무현황,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 투명하게 공개한다.	9	3	5	**4.111**	0.601
G5	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사항·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9	2	5	**3**	1.118
전체		9	1	5	**3.556**	0.249

○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 및 청년지원 정책 방안연구를 위해 **ESG 경영을 위해 남구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요도와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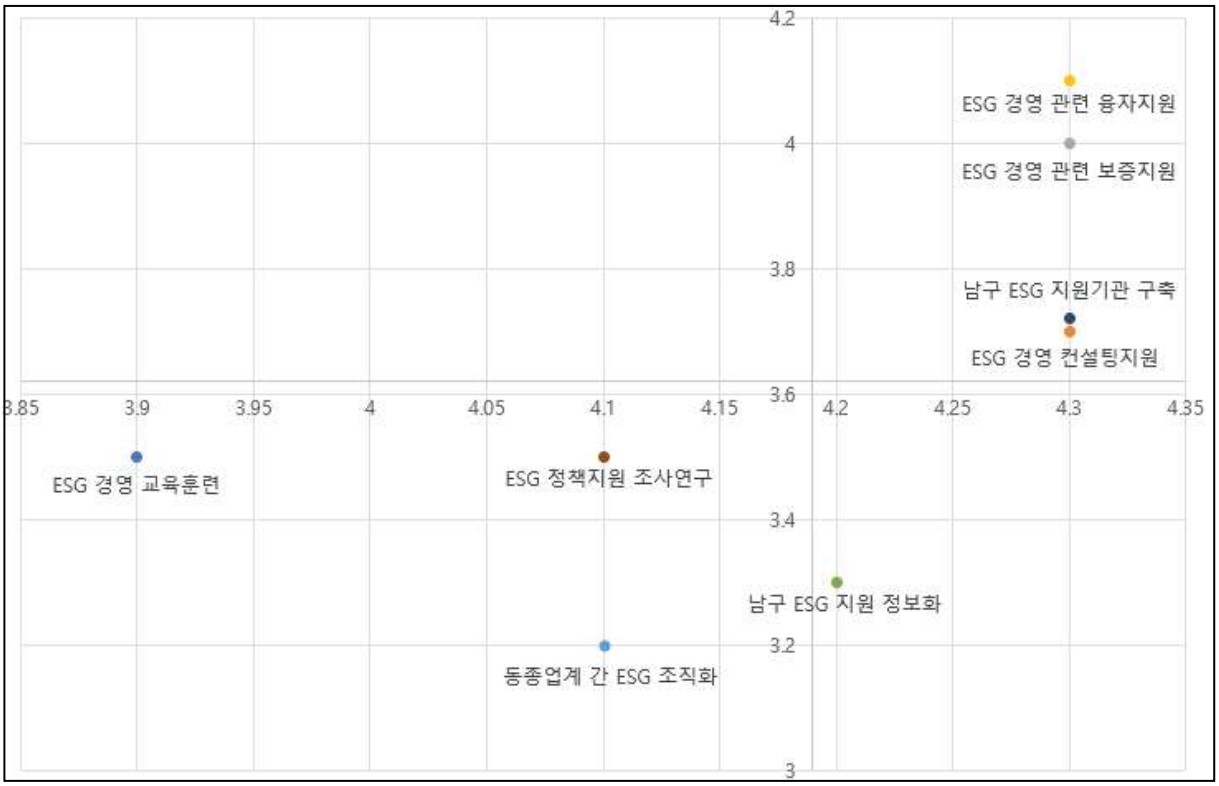
-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여 보면 ESG 경영 관련 교육훈련(5), 컨설팅(5), 보증지원(5), 융자지원(5), 동종업체간 ESG 조직화(5), 남구 ESG 지원 정보화(5), 남구 ESG 지원기관 구축·운영(5), ESG 정책지원 조사·연구(5)에 대해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정책 중 효과성 기대를 확인해 보면 ESG 경영 관련 융자지원(4.1), 보증지원(4.0), ESG 경영 컨설팅 및 지원기관 구축·운영(3.7) 등이 높게 나타나 중요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난 부분들과 동일한 수준의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리) 전반적으로 ESG 경영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단순히 해당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라기 보다 기존 지자체 지원정책에 대한 불신 또는 ESG 경영 관련 실무 부족에 대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원정책의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따라야하는 규제 요소로 접근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자본수요가 발생함으로 직접적 자금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기대도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ESG 경영 관련 자금수요와 함께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남구의 ESG 지원기관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도와 효과성을 같이 기대하고 있음으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조직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표3-4> 부산 남구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No.	문항	N	중요도				효과성 기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Ⅰ-1	ESG 경영 교육훈련	10	2	5	3.9	1.101	2	5	3.5	0.972
Ⅰ-2	ESG 경영 컨설팅 지원	10	3	5	4.3	0.823	2	5	3.7	0.949
Ⅱ-1	ESG 경영 관련 보증지원	10	3	5	4.3	0.675	3	5	4.0	0.943
Ⅱ-2	ESG 경영 관련 융자지원	10	3	5	4.3	0.675	3	5	4.1	0.876
Ⅲ-1	동종업체 간 ESG 조직화	10	3	5	4.1	0.876	1	5	3.2	1.135
Ⅲ-2	남구 ESG 지원 정보화	10	3	5	4.2	0.789	1	5	3.3	1.059
Ⅳ-1	남구 ESG 지원기관 구축	10	3	5	4.3	0.866	2	5	3.7	1.118
Ⅳ-2	ESG정책지원 조사·연구	10	3	5	4.1	0.876	2	5	3.5	0.972
전체		10	2	5	4.19	0.135	1	5	3.62	0.092

-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IPA분석(Impac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내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효과성 기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값들은 개별 정책에 대한 상대적 차이로 이해해야 함
- 상대적으로 지원 정책의 중요도도 높고, 효과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1사분면)으로는 ESG 경영 관련 융자지원, 보증지원과 같은 정책금융지원과 기업에 직접적 수혜가 요구되는 ESG 경영 컨설팅, 남구 ESG 지원기관 구축이 있음
-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보는 정책(3사분면)으로는 ESG 경영 관련 교육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인적자원의 유출입이 잦고, 개인별 업무강도가 높은 중소기업 입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으며, 정보교류가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동종업계 간 ESG 조직화, 실제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ESG 정책지원 조사연구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 간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중요도와 낮은 효과성을 나타내는 정책(4사분면)에는 남구 ESG 지원 정보화 정책이 나타났음. 이는 현재 남구 내 대다수 기

업들이 ESG 관련 정보 부족에 따라 ESG 경영에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지원할 수 있는 ESG 지원 정보화 정책이 시급하다 볼 수 있음



<그림3-1> 부산 남구 ESG 지원제도/정책에 대한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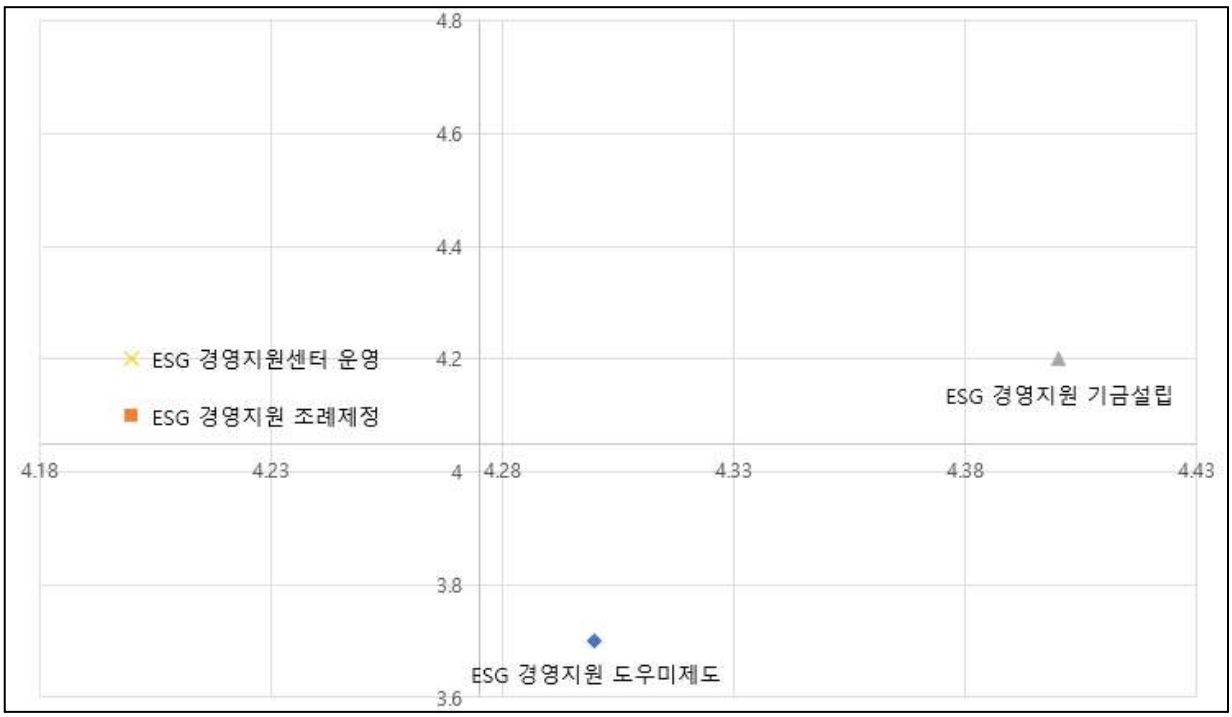
○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 및 청년 지원 정책 방안연구를 위해 ESG 경영을 위해 남구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정책 중 **인프라 지원에 대한 인식부분을 중요도와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았음

- 남구 ESG 경영 인프라 지원 정책은 남구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복합정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ESG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ESG 청년 도우미 제도운영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함

<표3-5> 부산 남구 필요 지원정책 중 인프라 지원에 대한 인식

No.	문항	N	중요도				효과성 기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V-1	ESG 경영지원 도우미제도	10	3	5	4.3	0.823	3	5	3.7	0.675
V-2	ESG 경영지원 조례제정	10	3	5	4.2	0.789	3	5	4.1	0.738
V-3	ESG 경영지원 기금설립	10	3	5	4.4	0.699	3	5	4.2	0.632
V-4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10	3	5	4.2	0.919	3	5	4.2	0.789
전체		10	3	5	4.3	0.091	3	5	4.3	0.069

-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IPA분석(Impac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내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효과성 기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반적으로 4점대 이상으로 평균값이 높다는 점에서 개별 값들은 정책에 대한 상대적 차이로 이해해야 함
- 상대적으로 지원 정책의 중요도도 높고, 효과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1사분면)으로는'ESG 경영지원 기금 설립'으로 나타남. 앞서 다룬 ESG 정책 인식의 중요성-효과성 분석 내용과 같이 ESG 경영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인프라적 요소로서 기금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 그리고 IPA 그래프 4사분면에 나타나는 'ESG 경영지원 도우미 제도'의 경우에는 실제 ESG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수요에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효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해당 정책의 비 경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SG 경영에 있어 재정적, 인적 문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남구형 ESG 경영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ESG 경영지원 기금설립, ESG 경영지원 도우미 제도의 동시적 도입이 시급하다 볼 수 있음



<그림3-2> 부산 남구 ESG 지원제도/정책 중 인프라 지원 IPA 분석 결과

Ⅳ 부산 남구 ESG 경영지원을 위한 방안

1. ESG 경영지원 및 청년정책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 부산 남구 ESG 경영 및 청년 지원 방안의 전제

- 본 연구는 남구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금융업과 철강, 석유화학 기업 등 글로벌 ESG 경영의 규제적 환경에 맞닥트린 남구 주축 산업 및 기업군을 비롯하여 부산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소재한 남구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남구형 ESG 경영 및 청년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하지만, 금융 대기업과 업력이 긴 토착 제조기업, 그리고 IP 기반 신생 스타트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ESG 정책 방안을 기초 지자체인 남구가 포괄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 역량 및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전후방 산업 간 가교역할을 하는 남구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ESG 경영 및 청년지원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 기본조건 : 기본 경영환경 개선

- 먼저, ESG 경영을 위해 고객사(원청, 하도급)가 요구하는 객관적 기본조건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기본조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국제인증으로는 환경분야 ISO14001, 50001, 사회분야 ISO26000, 45001, 지배구조분야 ISO37001, ESG 전반의 EcoVadis 등이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의 EPEAT, RBA 및 자동차 분야의 Drive Sustainability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이러한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국제인증은 ESG 경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들과 광역·기초 일부 지자체의 수출지원 정책 내에

포괄적 범위에서 획득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자격이 수출기업에 한정되어 있거나 부처별 별도기준에 충족해야 하는 등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접근의 허들이 많아 효과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 따라서 ESG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업경영 환경개선 지원을 남구에서 우선적,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가장 직접적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ESG 경영 관련 융자·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기초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과 세원으로는 해당 정책을 지속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음으로 남구 ESG 경영지원 기금의 설치를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수목적 기금설치를 위해 남구의 지역적 난제 극복에 의회와 구청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소재 ESG 경영 선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재원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의 효과적인 설치와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지원구조 :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 남구 상위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경우에도 ESG 경영 지원체계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지자체 차원의 ESG 관련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 조직 구성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부산 남구의 경우 ESG 관련 전담부서, 인원이 전무하고 ESG의 경우 환경, 일자리경제 등 관련 부서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부산 남구 기업가들의 경우 대부분 ESG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원인은 먼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생시키기에 부족한 행정적 조직체계, 인적·재정적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으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수출 중심 기업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ESG 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포괄적 사업을 수행하기 힘듦

- 따라서 남구 내 ESG 경영 지원 전담부서 확충과 동시에 지역 내 대·중견·중소기업 간 ESG 경영의 직접적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이 요구됨
-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앞서 살펴본 충남의 사례와 같이 ESG 경영 활성화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부산 남구에 적합한 ESG 경영 지원의 운영 세부사항 심의를 통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맞춤형 지원 기반 구축 : 남구 ESG 경영 지원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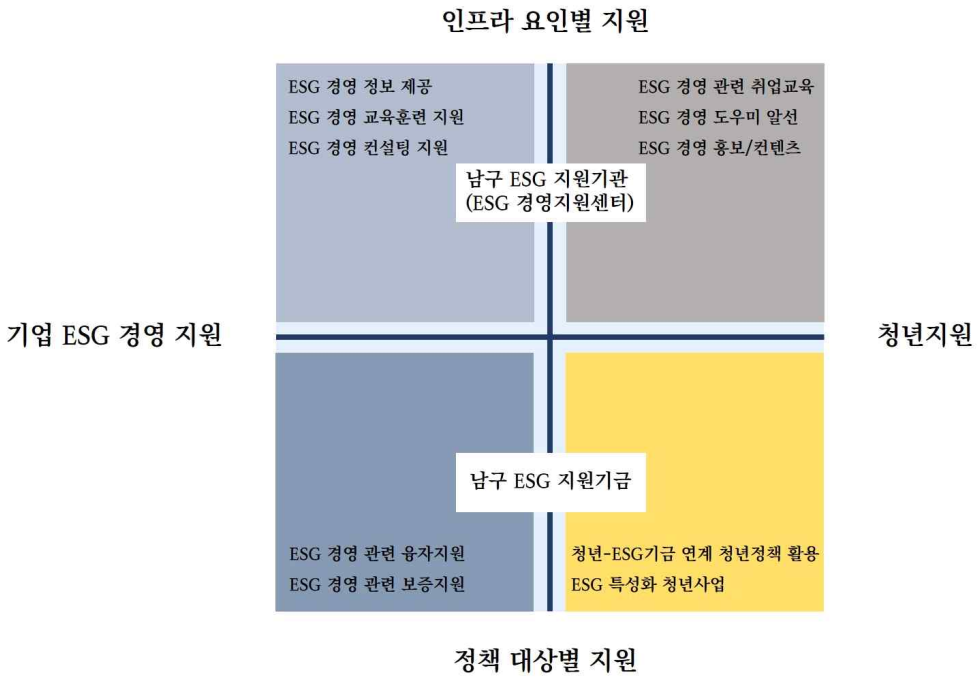
- 중소기업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기금과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자금은 운영 또는 설비자금 등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운전사업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음. 따라서 미래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며 ESG 경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남구 내 기업의 비재무적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부산 남구 ESG 경영 지원 기금’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약간 다른 사례이긴 하나 부산 남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부산 남구 청년기금’이 올해 시행되었음. 이는 기금 구축 목적과 청년정책이라는 대상에 한정하여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 것임.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기존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비재무적 관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해당 기금 설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ESG 경영지원 및 청년정책을 위한 입법전략

○ 전술한 내용과 같이 본 연구는 부산 남구 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실태 연구로서 남구 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 확인과 제언의 목적을 가짐

- 앞서 ESG 역량 부족, 관련 인적자원 부족이 심각한 남구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ESG 경영지원 및 남구 청년정책 간 연계를 위한 시너지 강화 및 실행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필요함
- ESG 경영 지원이 요구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청년정책은 정책관점과 목표, 내용에서 전혀 다른 부분이긴 하나 먼저 제정된 '부산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시책에 관한 사항을 '남구 기업 ESG 경영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남구 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음



<그림3-3> FGI 주요 결과에 따른 입법방향

Ⅴ 결론 및 제언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전체 고용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46.8%, '18년), 일본(68.8%, '16년)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임.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중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25] 부산 남구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24,190개 사업장, 93,744명이 종사하고 있음. 이중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제조 및 IP기반 스타트업 기업은 3,500여 업체로 추산됨

- 또한 남구 대연·용당 창업촉진지구 지정으로 266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 지역발전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을 확보함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환경이 지속가능발전, 친환경, ESG 경영 등 전 산업 전후방 기업의 규제적 요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발효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최대 창업집적 지역이면서, ESG 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융, 철강 및 석유산업 토착기업이 소재하는 지역특성에 따라 남구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남구는 2016년 기준 제조 관련 중소기업이 15,984개소에서 2021년 24,190개소로 약66% 증가[26]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임.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 자본금이 낮거나 개인사업자가 많아 기존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는 ESG 경영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미달하거나 그 외 기업 관련 정부지원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해당 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소

25) 노민선, 2021,「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 일자리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6) 통계청,「부산광역시 남구 기본통계」

양, 지식이 부족하거나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부재 등 글로벌 ESG 경영 환경에서 요구되는 공급망 관리측면에서의 위험요소로 노출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기존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기업 지원정책이 대부분 지원이나 참여요건을 맞춘 지역 소재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집행되어 왔으나, ESG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ESG 경영 기준의 일관성을 요구함으로 직접적인 수출기업이 아니어도 해당 기준이나 규제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수출품의 원청기업이 해당 규제적 요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등의 행동을 취할 경우 남구 소재 관련 기업의 매출과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남구 ESG 경영에 대한 기업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노력

○ 남구 ESG 경영 지원과 청년 지원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법률/제도가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일반적 이해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

- 부산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와 관련한 법률·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법률·제도적 변화가 단순히 입법권을 가진 의회나 집행부(부산 남구)의 일방향적 노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님. ESG 경영에 있어 지역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ESG 경영 의무공시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 단위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참여가 요구되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산 남구 청년들의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임

3. 남구 ESG 경영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노력

○ 본 연구를 통해 남구 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글로벌 환경에 의한 경영의 어려움, 환경규제 변화와 기업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능력 저하, 관련 지원정책의 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확인된 문제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더욱 중요하게 확인된 사항은 남구 소재 기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인식하고 제안된 일부 지원 제도가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남구 소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무력감을 보여주는 내용임
- 남구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변화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남구를 포함한 관의 행·재정적 지원, 기업과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일할 수 있는 남구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즉, 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부분적·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남구 소재 기업 및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ESG 경영은 수출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장벽과 같은 것으로 EU를 비롯한 모든 ESG 선도 국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입법과 행정이 실제 현장의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이 마땅하며 관내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산업군별 대응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야 함. 이는 ESG 경영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해당 기업의 ESG 경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등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행정적 변화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

- 특별한 어떤 한 방법을 통한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시도하려는 인식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전제로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수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남구 소재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을 자체 예산만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다양한 기획·시범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ESG 경영지원센터, ESG 경영지원 기금과 같은 정책들은 현재 관련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기반하여 계획 중인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음
- 그리고 ESG 경영 관련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지원사업은 현재 공급망 관리가 급박한 대기업, 규제 관련 수출품 기업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음으로 부산 남구와 같이 정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ESG 경영 지원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정책이 향후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강영숙·신술위, 2023, “글로벌 ESG 정책 동향과 자금흐름 영향”, 『Issue Analysis』, KDI 경제정보센터

강철구·고재경·안찬중 외 1명, 2022, 「경기도 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고재경·강철구·예민지 외 1명, 202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김수정, 2022, “2022년 ESG의 주요 이슈는?”,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윤경, 2019, “기업 비재무적 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KERI 정책제언 19-19, 한국경제연구원

변해원·김동겸·손재희, 2021, 「Issue Report 2021-08」, 보험연구원

심수연, 2023,“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3-24호, 자본시장연구원

윤용희·이상호, 2021, “ESG로 인한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변화와 대응 -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BFL 110권, p.6-17

이은선·최유경, 2021,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슈페이퍼』 21-19-④, 한국법제연구원

인소영·박기영, 2021, “기후변화의 경제학”,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p.137-199

최부경·어도선·서주석 외 1명, 2023, 『대학 ESG 가이드라인 V1.0』, 한국ESG경영원

허종호·박병규·김리아 외 2명, “소비자 관점의 ESG경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소비자학연구 제34권 제2호, p.99-127

한동숙, 2021,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재정포럼 제306호, p.30-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상범·권세훈·임상균, 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인창·김고운·백종락 외 1명, 202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_____, 2021,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_____, 2023, 「탄소중립·녹생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2021,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기상청, 2023,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의 이해」
노민선, 2021,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 2021, 「부산지역 스타트업 현황과 실태 분석」 보고서
_____, 2022, 「부산지역별 핵심산업과 기업」 보고서
삼정KPMG, 2023, 「삼정 Insight」, Vol.86
윤진수·한상훈·안성조, 「법의 미래」, 2022, 법문사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2023,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와 도전」
한국ESG경영원, 202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1,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21-027
_____, 2021,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_____, 2023,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
_____, 2023, 「미국 ESG 트렌드와 공급망에 주는 시사점」
Russell Investments, 2020, 「Summary of the 2020 PRI Assessment」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 누리집, https://www.2050cnc.go.kr/ (accessed Oct. 202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www.elis.go.kr/ (accessed Oct. 2023)

별첨 1. 관련 조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1.12.30]
(제정) 2021-12-30 조례 제 5118호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35-343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11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시행 2021.07.23]
(제정) 2021-07-23 조례 제 57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창업진흥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3.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정) 2022.11.04 조례 제1735호

관리책임부서명 : 디지털도시과 스마트도시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423-79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이하 "강남구 등"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강남구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강남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및 이에스지(ESG)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 조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8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강남구 등이 추진하여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9조(강남구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① 강남구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② 강남구 등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성과지표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의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제3장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협력제계 구축 등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설문지 및 FGI 질문지

부산 남구 ESG경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부산 남구 기업 ESG경영 지원 실태조사 및 청년 지원사업 검토·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 폐기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해주시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 연구수행기관 : 부산남구의회,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 연구책임자 : 사.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안영철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 ) 세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동거가족**	본인포함 ( ) 명
기업소재지	① 부산 남구 ② 부산 내 지역 ③ 기타 ( ) ※ 1곳 이상인 경우 모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유형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기타		
업종	※ 업종구분은 첨부된 표 참조		
주관적 건강	① 상 ② 중 ③ 하		
주관적 경제	① 상 ② 중 ③ 하		

□ ESG경영 기본 인식 (개인적 인식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환경 (E)	기후변화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유해화학물질(대기, 토양, 수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 절감에 노력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위해 연구, 개발, 실행에 노력한다.					
	환경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경영과 성장을 위해 환경경영활동에 많은 투자를 한다.					
사회 (S)	지역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자선기부, 자원봉사 등)을 실천한다.					
	협력사(원청,하도급)를 파트너로 존중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안전 및 보건을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고객만족 실천 및 소비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지배구조 (G)	주주(투자자)의 가치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비리사실이 없다.					
	경영진이 높은 도덕성 및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경영활동(사업내용, 재무현황,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업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사항·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부산 남구에 필요한 지원제도 / 정책에 대한 인식

<중요도> ←낮음				높음→	요 소 (정책 / 제도)	<효과성 기대> ←낮음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Ⅰ-1. ESG관련 교육훈련					
					Ⅰ-2. ESG경영 컨설팅					
					Ⅱ-1. ESG경영 관련 보증지원					
					Ⅱ-2. ESG경영 관련 융자지원					
					Ⅲ-3. 동종업체 간 ESG 조직·협업화					
					Ⅲ-4. 남구 ESG지원 정보화					
					Ⅳ-1. 남구 ESG 지원기관 구축·운영					
					Ⅳ-2. ESG정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Ⅴ-1. ESG경영지원 도우미제도(청년)					
					Ⅴ-2. ESG경영지원 조례제정					
					Ⅴ-3. ESG경영지원 기금설립					
					Ⅴ-4. ESG경영지원센터 운영					

※ Ⅰ인력·교육 지원제도, Ⅱ금융지원제도, Ⅲ혁신기술지원, Ⅳ 정책제도 지원, Ⅴ인프라지원

부산 남구 ESG경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FGI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부산 남구 기업 ESG경영지원 실태 조사 및 청년지원사업 검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남구의회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글로벌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경영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의 준비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2030에 기반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관심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지자체 차원의 ESG경영지원 방안 마련 및 이와 연계한 청년지원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잘 정리하여 부산 남구 ESG경영지원과 청년지원사업 정책개발에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의회 ·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안영철)

□ FGI 개요

- FGI 진행일시 : 2023년 11월 24일 11:00~ (예정)
- FGI 진행 : 안영철 (사.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 김근우 의원 (부산남구의회)
- FGI 참여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 FGI 참여 원칙

: ESG경영 관련 질문과 개별적인 질문 구분(답변도 동일)

□ 주요 질문

- 남구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평가와 향후 가능성)

ex) 연구를 위한 기본 배경(부산 남구 지역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

- 남구 기업의 지속가능 및 ESG경영 준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긍정/부정

- 남구소재 기업에 대한 기초지자체 정책 또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평가도 함께.

ex) 기업 및 경영환경 변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공급망 ESG환경 변화, 사회적 환경) ex) 과거와 현재 비교 / 다른 지역과 비교 가능

- 남구소재 기업의 ESG경영과 관련 청년지원사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 기초지자체 차원의 ESG경영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공헌활동, 지배구조 개선지원 등

- 본인 기업의 ESG경영관련 준비사항 또는 연계 기업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ex) 원청사 요청 ESG경영 기준, 자체 ESG 경영현황은 어떠한지?

- ESG경영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ex) ESG에 대한 이해, 조건, 기준에 대한 이해 여부

- 남구 기업 ESG경영과 관련 청년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나요?

ex) ESG 정보, ESG경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지역공헌을 위한 청년고용 등

- 그 밖에 부산 남구 ESG경영 지원방안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